

컴플라이언스

1 공약 개요

1. ESG

- ESG 일반

- 중소·벤처기업 ESG 역량 강화 및 적용 확대를 위한 대응시스템 구축
 - ▶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설치, 로드맵 마련, 부처별 정책 효율적 추진
 - ▶ ESG 평가지표의 표준화 추진
 - ▶ ESG 지표를 활용해 기업 현황 평가, 금융 및 세제지원
- 대기업이 협력 중소·벤처기업 등에 ESG 경영역량과 기술협력 촉진

- 환경(Environment)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방안 전면 수정
 - ▶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목표는 준수,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으로 공론화 논의를 거쳐 확정
- 탄소저감 R&D 및 투자 확대
 - ▶ 산업계 · 학계 ·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기구' 구성
 - ▶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 ▶ 에너지 절약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사회(Society)

-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
 - ▶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로운 운용 추진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 ▶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법 제정 등 효율성, 전문성, 신속성 제고
-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최소 규제

- 지배구조(Governance)

-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 주식 물적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2. 금융

-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 내부자들의 대량 장내 매도로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
- 지분 매매로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관행 재검토

-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
-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3. 공정사회

-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 경제적 공동 관계 없음이 증명된 경우 예외 인정 등

-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 절차적 공정성만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한 채용 내용까지 포괄하는 ‘공정채용법’으로 확대 개편
- 채용시험 출제·관리 시스템 투명성 강화, 국가자격시험 특례 재검토, 채용 가산점 제도 불공정성 시정
- 단체협약 내 불공정채용 관련 조항 무효화
- 친인척 고용 승계, 전·현직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적발 시 관련자 입사 무효화

-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
 - 사전 예방 수단, 엄정한 법 집행 체계, 기술 탈취 구제 수단의 효율적 운영 방안 추진

4. 안전

- **건설공사 안전 관리체계의 혁신적 개선**
 -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감리자, 근로자 등 건설사업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임 및 역할 분담 강화
 - 발주자와 사업주의 적정 공사비(안전 관리비 등) 확보 및 충분한 공사 기간 보장, 안전 기술 개발 및 보급 등 안전한 공사 여건 마련
 - 감리자의 감리권, 공사 중지권 보장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강화**
 - 불법하도급, 부실 감리, 행정당국 승인 없는 무단 시공, 공법의 무단 변경, 불량 자재 사용, 채용 강요 및 공사방해 행위 등 처벌 강화
-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대상 확대**
 -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사가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하도급사 선정 시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2

구체적 분석

1. ESG

- **ESG 일반**
 - 당선인은 ESG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ESG 역량 강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당선인은 중소기업의 ESG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ESG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법제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 환경(Environment)

-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조연설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2030 국제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NDC를 유지할 것인지 화두가 되었으나, 당선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는 이전 정부와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당선인은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NDC 달성 방법을 달리 하였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당선인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하여 원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폭을 줄일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 새로운 정부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과정에서 각종 법률적 쟁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 사회(Society)

-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선인은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를 개선하여 을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규제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각 사안에 관한 법률 개정이나 입법 등 법률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배구조(Governance)

- 당선인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하여 벤처기업과 대기업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벤처기업의 경우,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여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을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투자자가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창업자의 주식 지분율은 점차 감소합니다. 이처럼 투자자의 주식 지분 및 의사결정권이 커지면 창업자는 자신의 의도대로 혁신을 이어나가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당선인의 공약과 같이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되면 창업자는 자신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방어하고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 대기기업의 경우, 주식 물적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보호대책을 제도화하여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을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대기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하여 유망한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한 후 분할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소액주주는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습니다.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유지되어 지배주주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모회사의 소액주주의 경우 유망한 사업부문이 빠져나간 만큼 모회사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 당선인은 이러한 물적분할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물적주주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물적분할된 회사 상장 시 모회사 소액주주에게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 금융

-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 당선인이 제시한 위와 같은 금융 분야 주요 공약은 자본시장법 또는 상법 개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세부적으로 이를 규율하는 규정들은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각 유관기관 규정, 내부 지침 등 하위 규정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법 개정예 따라 하위 규정들의 연쇄적 개정 역시 예상되고, 그에 따른 법률적 쟁점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공정사회

-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 ‘공정한 채용 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향후 제정 및 적용 과정에서 해석의 다의성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보호법 제정 가능성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

-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법 등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관련한 민원제기 및 신고 사례가 증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 집행 강화가 예상됩니다.

-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당선인의 위 공약 관련하여 플랫폼 산업의 다양성, 역동성을 감안한 자율규제의 틀 안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안전

- 건설공사 안전 관리체계의 혁신적 개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강화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신설 운용에 따른 기업 경영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그와 관련한 법률상 쟁점 및 분쟁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1. ESG

- 당선인은 중소벤처기업의 ESG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세제 인센티브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세제 인센티브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의 ESG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에 ESG 경영체계를 갖추어 각종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벤처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ESG 경영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의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당선인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원전 비중을 높일 것을 공약하였기에, 원전과 관련한 법적 쟁점이 대두될 전망입니다. 다만 원전 비중 확대의 경우 별도의 법 개정 없이 기존 원전 재개 등 방식으로 실현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당선인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공정거래분쟁조정 통합법 등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그 방안으로 내세운바 있습니다. 이에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한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선 사전적인 법 위반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난 대선 국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두고 유력 대선후보들 간 의견이 갈렸습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전속고발권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당선인은 전속고발권이 의무고발요청제 등 제도와 조화롭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양 제도의 기능 조정 등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따라서 당선인의 공약 방향에 따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행사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경우에 비하여 기업 실무에서의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오히려 전속고발권 행사 사례 증가에 유의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 창업주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이 2021. 12.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2022. 1.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통과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해 기업활동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복수의결권 도입에 긍정적인바 향후 벤처기업법 등 법령이 개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되면 벤처기업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강구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법률자문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벤처기업 창업주의 행사 가능한 의결권 수가 달라짐에 따라 벤처기업 주주총회 실무에 변화가 있어 이와 관련된 법률자문 수요 역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대기업의 주식 물적분할 요건이 강화되면 물적분할 및 분할된 자회사의 상장을 통한 신규자금 조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물적분할 외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법률자문 수요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대책인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자회사 상장 시 우선적 신주인수권 부여 제도가 마련되는 경우 위 제도를 활용하려는 소액주주들의 법률자문 수요 역시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금융

- 자본시장의 모니터링 및 금융 당국의 제재 강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사전적 컴플라이언스 강화, 회사 내규의 검토 및 새로운 정부의 공약에 따른 정책 변화에 적합하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공정사회

-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등의 규제 완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 실무에서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에 대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제재 또는 처벌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용 및 리스크를 감안할 시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대응 방안 분석 및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당선인이 디지털 플랫폼 상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것을 공약하였으나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위에 폐기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산업에 관하여도 기존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의한 규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공정거래법상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경제를 규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관련한 법률상 쟁점 및 분쟁에 대하여 법률자문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는 법 제정에 따른 사전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채용의 실질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규정들의 해석이 문제될 수 있고 그에 따라 HR 실무에서의 혼선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선인의 공약 방향에 알맞은 사전적 검토 및 향후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 유통, 가맹, 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및 기술유용행위 익명 제보센터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의 민원 제기 및 신고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거래 시 사전적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료 관련한 비밀유지, 권리관계 귀속 등의 이슈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간 사전 협의 및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안전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당선인은 산업 및 노동시장에 부담을 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단시간 내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 및 법 적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적인 규제 검토 및 컴플라이언스 분석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담당변호사



변호사 최재웅

 02-3479-5762

 jaewoong.choi@barunlaw.com